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83호) 2010. 12. 209~234

‘좋은 일자리’의 결정요인과 지역 간 분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

Determinants of ‘Good Job’ of Household Heads and Changes in Regional Disparity of Distribution of ‘Good Job’

송 영 남**
Song, Yong-Nam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외환위기 직후 크게 하락하였던 우리나라 일자리의 양과 질이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일자리의 질과 양의 지역 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 질의 지역 간 격차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LIPS자료를 이용하여 일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먼저 ‘좋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하여 연구하여 누가 ‘좋은 일자리’를 가지며 그 확률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한 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997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의 10년 동안 국내의 ‘좋은 일자리’ 변화추세 및 지역 간 격차가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교육수준, 성별, 직종, 기업의 규모, 정규직 여부, 그리고 지역이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외환위기의 영향이 대구경북 등 비서울 지역에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간 지역의 일자리 질의 회복수준이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따라서 동 기간 동안 지역 간 ‘좋은 일자리’ 격차가 증가하였다.

* 본 논문은 전북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논문 접수일: 2010. 8. 25, 심사기간(1,2차): 2010. 11. 11 ~ 2010. 12. 24, 게재확정일: 2010. 12. 24

□ 주제어: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분포, 지역 간 격차

Following the 1997's economic crisis in Korea, there was a large fall and a quick recovery in the quality of jobs and the regional disparity in the quality of jobs had widened. No research, however, has been done regarding this issue. This paper, using KLIPS data,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and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f 1997 on the quality of jobs of working household heads, and the changes in the disparity in the quality of jobs between six regions. Education, sex, type of job, firm size, permanent job, and region play key roles in holding a good job. The impact of the crisis on Non-Seoul, especially Kyungbuk and Daegu area was most severe and the recovery in the quality of jobs showed regional diaparity as well. The regional disparity, therefore, had widened over the ten year period.

□ Keywords: good job, distribution of good job, regional disparity

Ⅰ. 서 론

1970대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그 결과 실질소득의 상승과 함께 빈곤율도 하락하는 등 평생고용 및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도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실질소득과 직업의 안정성이 크게 하락하는 등(금재호, 2003) 국내의 노동시장형태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가 지난 수년 이후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의 실업률이 하락하였고 일자리의 질과 양의 개선효과가 나타났지만, 개선효과의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들어섰으며 성장세 또한 둔화되면서 고용창출이 둔화되고 분배상황도 악화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창출은 바로 국민의 복지증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일'을 통하여 빈곤탈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자리 창출에 고심하여 왔다.[1] 그러나 "질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 경우

1)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02년의 60.0%에서 2009년의 58.6%로 1.4%포인트 하락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2009년에는 60.8%로 2002년의 62.0%보다 무려 1.2%포인트가 하락하는 등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국민복지의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는 '2020

장기적으로 실업 재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단순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은 극히 단기적인 실업률 하락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인 실업문제 해결과 빈부격차의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금재호(2003)는 취업자가 있는 일하는 가구의 14% 정도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취업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의 질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보수가 좋은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 청년층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더디게 함으로써 인적자원의 낭비가 심해지는 등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청년층 고용률은 2000년의 43.4%에서 2009년의 40.5%로 무려 2.9%포인트가 하락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2000년의 47.2%에서 2009년의 44.0%로 3.2%포인트가 하락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지역별 일자리 창출능력은 상이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좋은 일자리' 분포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창출 정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역 간 소득 불균형 및 빈부격차가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좋은 일자리'의 창출 및 유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과 지역 간 '좋은 일자리' 분포의 현황 및 지역 간 '좋은 일자리' 분포의 변화형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고용친화적인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좋은 일자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누가 '좋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높은가를 연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지역 간 '좋은 일자리' 분포의 현황 파악 및 지역 간 격차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각 지역의 '좋은 일자리'의 현황·추세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좋은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프로빗모형을 적용하여, 누가 '좋은 일자리'를 가지며, 그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분석하며 '좋은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한 외환위기 직후(1997-1998년)와 '좋은 일자리'가 회복되었던 10여년 간의 기간으로(1998-2007년) 나누어 '좋은 일자리'의 지역별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분포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연구자료에 대한 설명과 좋은 일자리의 정의, 그리고 분석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 III장에서는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주 좋은 일자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가계의 특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하여 가구주를 대상으로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행하여 어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였고, 일자리공시제를 시행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시행하여 재정지원의 차등화를 계획하고 있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떤 요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좋은 일자리 분포' 현황 및 변화의 형태, 특히 권역별 변화를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Ⅱ.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가계 근로소득을 이용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어떤 사회·경제적 요소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게 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1997-2007년 사이의 '좋은 일자리'의 변화추세를 이용하여 지역 간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비농촌지역의 16세 이상의 가구주가 있는 5000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노동시장 참여, 소득, 교육, 훈련, 그리고 기타 사회경제적 활동에 관하여 1998년도부터 매년 설문조사에 의해서 얻어진 패널자료(KLIPS)를 활용하였다.

KLIPS는 비농촌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1997년의 외환위기가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가 없으며 설문지의 계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변수가 일관성을 잃어 일부 변수들의 연도별 직접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가계의 소득, 노동시장이동성, 경제활동, 소득, 교육 및 훈련 그리고 기타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여 노동 및 빈곤관련 연구자료로 애용되어 왔다 (금재호, 2003).

본 연구는 또한,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12월 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0년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 자료의 부재로 2000년 이후의 자료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원래의 최저생계비 자료는 가구원이 6인인 경우까지만 발표되었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의 가구는 5인 가구와 6인 가구의 차이를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2)]

2) 최저생계비는 각 가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일 때 빈곤가구로 규정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이라고 정의함.

<표 1> 최저 생계비

(단위 : 천원/월)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인가구	292	314	317	324	334	345	356	368	401	418	436	463
2인가구	483	521	525	537	553	572	589	610	669	701	734	784
3인가구	664	716	722	738	760	787	810	839	908	940	973	1,027
4인가구	835	900	908	928	956	990	1,019	1,055	1,136	1,170	1,206	1,266
5인가구	950	1,024	1,033	1,056	1,087	1,125	1,159	1,200	1,303	1,353	1,405	1,488
6인가구	1,072	1,155	1,165	1,191	1,227	1,270	1,308	1,354	1,478	1,542	1,610	1,712

주: 7인 이상 가구에는 5인과 6인의 차이(1997년: 122천원, 1998년 131천원, 1999년 132천원)를 더함

자료 : 보건복지부 공표자료

2. '좋은 일자리'의 정의 및 분석방법

'좋은 일자리'는 도전적이고 개인의 기술수준과 적성에 맞으며 우수한 직업의 안전성과 밝은 장래, 높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좋은 부가급부를 동반한 보수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20-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좋은 직장의 기준으로 비전, 근로에 대한 보수, 그리고 안정성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 2004).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산업심리학(직무만족도), 사회학(사회적 위세), 경제학(임금과 부가급여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편협성때문에 '좋은 일자리'의 가장 바람직한 지표는 그 일자리로부터 주어지는 결과로서의 보상(경제적 측면)과 직업적 위세(사회적 측면), 그리고 근로자 자신이 그 일자리에 대해 갖게 되는 직무만족도(주관적 측면)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들이 있다 (방하남 외, 2006). 따라서 방하남 외(2006)는 보수, 직무만족도, 직업위세 등을 종합하여 '좋은 일자리'의 개념을 구성하여 개인들이 '좋은 일자리'에 속할 확률의 결정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용기회와 임금 및 노동시간과 같은 일자리 특성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사회적 안전망의 수준까지 고려한 11개의 지표 및 28개의 세부항목들을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통계적 측정을 시도한 연구도 있었다.[3)]

일부 연구는 임금이 가장 덜 중요한 결정요인에 속하고 '고용안정성'과 '일의 성격'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주장하였고 (방하남 외, 2006), 2003년도 KLIPS자료에 의하면, 66.3%의 가구주가 '직업의 안전성'을 가장 또는 두 번째 중요한 일자리의 특성으로 고려하

3) 방하남 외(2006)와 석재은 외(2005)은 '좋은 일자리'의 정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음..

고 있으며 28.3%의 가구주가 '보수'를 가장 또는 두 번째 중요한 일자리의 특성으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의 안정성, 직업지위, 직무만족도 등이 '좋은 일자리'의 정의에 함께 고려되어야 보다 현실에 적합한 정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 정의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좋은 일자리' 종합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좋은 일자리'의 구성 요소 중 어느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수 이외의 '좋은 일자리'의 특성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량화하기가 어려우며, 일자리 안정성, 비전, 사회적 인지도 등, '좋은 일자리'의 일부 특성은 보수와 '정'의 관계에 있으며 본 연구가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가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보수를 '좋은 일자리'의 기준으로 하고자 하며, '보수'와 '직업의 안전성' 등을 함께 고려한 '좋은 일자리'에 관한 연구를 추후에 진행하고자 한다. 물론 보수만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규정할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의 나머지 구성요소를 제외함으로써 편향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젊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 실업의 근본 원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격한 처우 격차'를 지적하고 있는 점과[4]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차이가 청년실업과 청년들의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의 원인이라는 점[5], 그리고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에 대한 보수를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를 정의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Levy 와 Michel(1991)은 근로에 대한 '보수'가 중산층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수준이거나 소득분포의 중간 수준의 상태일 경우를 '좋은 일자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또는 빈곤선)의 150% 이상의 보수를 보장하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규정하고 있다. Ahlburg et al (1995)는 최저생계비의 200% 이상 또는 300% 이상의 보수를 보장하는 일자리를 '좋은 또는 아주 좋은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다. 2003년 KLIPS 설문지에서 대부분의 가구주는 최저생계비의 300% 수준 이상이 되어야 '좋은 일자리'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기준을 준용하여 빈곤선의 150% 이상의 보수를 제공하는 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 빈곤선의 200% 이상의 보수를 제공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 빈곤선의 300% 이상의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는 '아주 좋은 일자리'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최저생계비(빈곤선)에 기준하여 좋은 일자리를 정의한 이유는 가구주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일자리가 가구의 생계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이상으로 보수를 제공해야 '좋

4) 취업·인사포털 인쿠르트가 신입 구직자 3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5) 보수가 좋은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청년층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더디게 함으로써 인적자원의 낭비가 심해지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의 47.2%에서 2009년의 44.0%로 3.2%p 하락하였다.

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구의 대부분은 가구주가 주 소득원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가구주가 보유한 일자리에 대한 분석에 한정한다. 물론 외환위기는 가구 구성원 대부분에 대해 영향을 주었고 따라서 일부 가구원은 외환위기 이후에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목적은 가구주의 '좋은 일자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누가 '좋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높은가를 연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좋은 일자리'의 지역 간 격차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가구의 노동시장 활동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일하는 가구주의 일자리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며 프로빗 분석을 이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분석과 '좋은 일자리 분포'의 지역별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다.

Ⅲ. 실증분석

이 장에서는 1998년도(제1차 KLIPS)자료와 최신 2008년도(제11차 KLIPS)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1절에서 누가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하여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될 요인을 추정한다. 그리고 2절에서는 1997년에서 2007년 사이의 전체적인 '좋은 일자리' 분포의 현황과 변화형태를 살펴보고 지역 간 격차의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량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1. '좋은 일자리'의 결정요인

이 절에서는 먼저 누가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하여 '좋은 일자'를 갖게 될 요인을 추정한다. 〈표 2〉에서 첫 번째 모형은 '괜찮은 일자리', 두 번째 모형은 '좋은 일자리' 그리고 세 번째 모형은 '아주 좋은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주가 각각의 일자리를 가지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의 값을 지니는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설명변수로 가구주의 교육수준, 성별, 직종, 거주지역, 근무하는 기업의 규모, 정규직 여부 등의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각 집단을 준거집단(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일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6]

6) 1998년은 침체가 가장 심한 연도이며 KLIPS원년도인 1997년과 1998년의 자료를 분석·비교한 결

1) 교육수준(Education): 고졸 이하 기준

교육수준이 '좋은 일자리'를 보유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교육수준을 고졸 이하, 대학교 이상(대학교 중퇴 또는 대졸자), 그리고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교육수준은 대체적으로 높은 보수의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도의 경우에는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주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98년도의 경우 대학교 이상 학력자는 준거집단인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150% 이상의 보수를 받는 '괜찮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15.1% 정도 높으며, '좋은 일자리'의 경우, 10.7%, '아주 좋은 일자리'의 경우 3.5%가 높으며,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경우에는 각각 30.5%, 29.1%, 13.6%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도의 경우에도 대학 이상자가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주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 4.7%에서 6.5% 수준으로 1998년도의 경우보다 낮으며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는 '아주 좋은 일자리'의 경우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도와 2007년도의 단순분석결과의 비교는 2007년도에 1998년도보다 학력이 '괜찮은 일자리' 이상을 소유할 확률에 영향을 적게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의 분석결과는 학력과 소득의 정(正)의 관계가 강할수록 교육투자욕구가 강해져서 학력인플레 현상이 강해지며 학력인플레 현상에 따른 미스매치가 커지게 되며, 그 관계가 약해질수록 학력인플레 현상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성별(Sex): 남성 기준

남성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의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성별 역시 일부 일자리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에는 여성이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남성과 비교하여 약간 낮은(약 7.9%)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좋은 일자리'와 '아주 좋은 일자리'는 1998년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2007년도에는 '괜찮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이 '괜찮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남성과 비교하여 각각 약 18.2%, 15.5% 낮

과 큰 차이가 없음. 또한, 1998년도는 외환위기 이후 '좋은 일자리 분포'가 가장 열악한 해임(1997년도와 1998년도 사이는 침체기임). 한편, 2007년도는 KLIPS 최신자료가 발표되었고 '일자리 분포'가 가장 좋아진 해이며 1998년과 2007년 사이는 회복이여서 두 해를 비교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해의 자료를 회귀분석에 활용하였음.

아져서 확률이 더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외환위기 이후 성별이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더욱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상과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1998년과 2007년 사이에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등,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수 있는 확률에 성별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직종(Job): '전문직 및 화이트칼라' 기준

직종이 '일자리'의 질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은 대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직종은 '전문직 및 화이트칼라 직종'이며 가장 낮은 보수를 지급하는 직종은 '블루칼라직종'이다. 1998년도와 2007년도의 경우 모두 '블루칼라직종'에 근무할 경우 준거집단인 '화이트칼라 직종'보다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주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으며, '서비스 및 판매직' '사무직' 등도 역시 모든 형태의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준거집단인 '화이트칼라 직종'보다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종이 일자리의 질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화이트칼라 직종'을 선호하는 이유 중 '보수'가 중요한 조건임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97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직종이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더욱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권역: 서울 기준[7)]

1998년도의 경우, 부산경남울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가구주들이 '모든 종류의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서울지역과 비교해서 유의적으로 낮다. 대부분의 비서울 지역의 가구주는 '괜찮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서울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일부 지역(인천경기, 대전충청, 광주전라 지역)의 가구주들만이 '좋은 일자리'와 '아주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수도권 가구주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 16개 시군을 비교분석할 수도 있었으나 표본의 지역 대표성이 부족하여 서울 등 6개 권역으로 한정하였음.

5) 기업의 규모: '1,000명 이상 대기업' 기준

기업의 규모가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할 확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보유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 확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결과 역시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가구주의 경우 모든 질의 일자리에서 준거집단인 1,000명 이상의 대기업과 비교하여 '괜찮은 일자리' 이상을 소유할 확률이 낮은데, '아주 좋은 일자리'의 경우에 1998년과 2007년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그 이유는 대기업, 공기업 모두 보수가 높지만 공기업의 일자리가 '아주 좋은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로자 500인 이상 1000명 미만의 대기업은 모든 일자리 형태에서 준거집단인 1,000명 이상의 대기업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5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거의 모든 범주에서 준거집단인 대기업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청년 취업자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청년들이 일자리 선택시에 가장 중시하는 것은 연봉수준인 것과 최근 젊은 구직자들이 청년 실업의 근본 원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격한 처우 격차'를 지적하고 있는 것[8]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우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일자리 결정 변수와 한계효과 (1998년, 2007년)

변 수	빈곤선 150% 이상 **(괜찮은 일자리=1)**		빈곤선 200% 이상 **(좋은 일자리=1)**		빈곤선 300% 이상 **(아주 좋은 일자리=1)**	
	계 수		계		계 수	
	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상수항	.289***	.575***	-.044	.472***	-.107***	-.004
교육: (고졸이하 기준)						
대학 이상	.151***	.047**	.107***	.065***	.035***	.060***
대학원 이상	.305***	.003	.291***	.056	.136***	.135***
경험	-.003	-.008**	.000	-.004	-.003*	.003
경험^2	-.000	-.000	-.000	-.000	.000	.000
성별(1: 여성, 0=남성)	-.079**	-.182**	-.022	-.155***	-.002	-.016
직종(전문직 기준)						
사무직	-.058	-.078**	-.071**	-.116***	-.019	-.101***

8) 취업·인사포털 인쿠르트가 신입 구직자 3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빈곤선 150% 이상 **(괜찮은 일자리=1)**		빈곤선 200% 이상 **(좋은 일자리=1)**		빈곤선 300% 이상 **(아주 좋은 일자리=1)**	
서비스·판매직	-.086***	-.085***	-.058**	-.127***	.020	-.084***
농림수산업직	-.152***	-.338***	-.105***	-.335***	-.020	-.168***
단순노무직 등	-.172***	-.129***	-.128***	-.194***	-.041***	-.147***
거주지역(서울 기준)						
인천경기강원	-.072***	-.008	-.038*	-.048*	-.025***	-.050**
부산경남울산	-.019	-.028	-.003	-.029	-.017	.006
대구경북	-.164***	-.048	-.102***	-.029	-.052***	-.073***
대전충청	-.129***	-.039	-.087***	-.084***	-.034***	-.087***
광주전라	-.112***	-.015	-.037	-.069*	-.016	-.055*
근무기업 규모 (1,000명 이상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129***	-.037	-.093***	-.046	-.039***	-.088***
500~999명	-.093	-.077	-.034	-.067	.071	.031
50~499명	-.171***	-.190***	-.093***	-.263***	-.024*	-.192***
5~49명	-.182***	-.237***	-.120***	-.343***	-.019	-.247***
1~4명	-.270***	-.411***	-.141***	-.456***	-.027***	-.240***
자영업자(나홀로)	-.141*	-.132***	-.037	-.141***	-.008	-.090**
(피고용자 있는)자영업	-.003	.054	.092*	.124****	.088**	.169***
미확인 규모	-.278***	-.306***	-.160***	-.310***	-.041***	-.184***
정규직 여부 (1: 정규직 0: 정규직 아님)	.117***	.150***	.092***	.202***	.038**	.179***

주: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함. 자료: KLIPS 1999를 이용하여 얻어진 회귀분석 결과임.

<표 3> 성별 노동시장 참여율과 실업률, 1997-2008

(단위 : %)

	1997			1998			1999			2007			2008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2.5	76.1	49.8	60.6	75.1	47.1	60.6	74.4	47.6	61.7	73.9	50.1	61.4	73.4	49.9
고용률	60.9	73.9	48.6	56.4	69.2	44.4	56.7	69.1	45.2	59.8	71.3	48.9	59.5	70.9	48.7
실업률	2.6	2.8	2.3	7.0	7.8	5.7	6.3	7.2	5.1	3.0	3.5	2.4	3.0	3.4	2.4

주: 구직기간 1주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표 4> 성별 일자리 종류별 비율

(단위 : %)

	1997			1998			1999		
일자리의 종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괜찮은 일자리	53.3	54.3	43.1	44.8	46.1	31.1	53.7	55.5	35.1
좋은 일자리	33.9	34.2	31.5	26.5	27.3	18.7	32.0	33.0	22.4
아주 좋은 일자리	13.6	13.3	16.2	8.8	8.9	7.6	15.5	15.9	11.6

	2005			2006			2007		
일자리의 종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괜찮은 일자리	66.7	68.4	53.2	70.6	72.9	53.0	70.6	72.8	55.3
좋은 일자리	49.7	51.1	39.4	54.1	55.9	41.4	55.8	57.7	42.8
아주 좋은 일자리	23.5	23.5	23.3	27.7	28.5	21.7	28.4	29.0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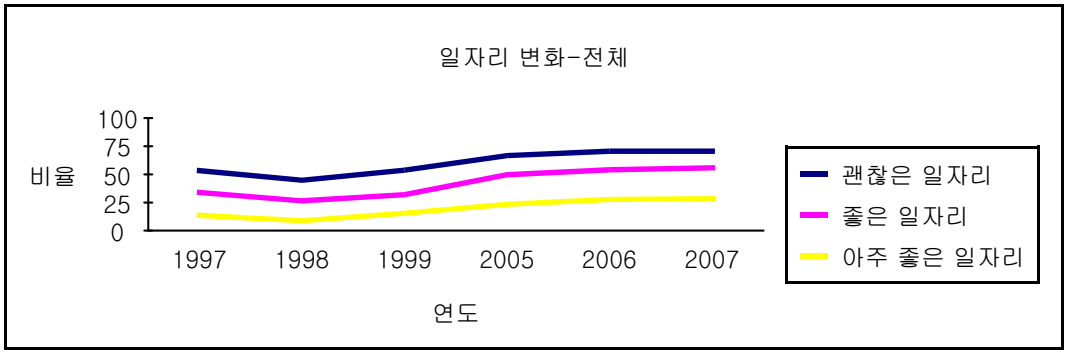
* 주: KLIPS 제1차 설문은 1998년 5월에 진행되었는데, 소득은 1998년도 5월 기준이며 1999년도의 제2차 설문은 1998년 12월 기준임.

회복기인 1998년 이후에는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와 '아주 좋은 일자리' 모두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2007년도의 경우에는 1998년도와 비교하여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와 '아주 좋은 일자리'의 비율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는데, 여성의 증가율이 각각 57.9%, 111.3%, 225.8%로 남성의 77.8%, 128.9%, 225.0%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경기회복의 영향이 여성에게 컸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여성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여성의 하락폭이 남성의 하락폭보다 커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9)]

9) 동 기간 동안의 여성 취업자 수의 변화와도 일관성이 있다. 1997년도의 여성취업자는 약 8,7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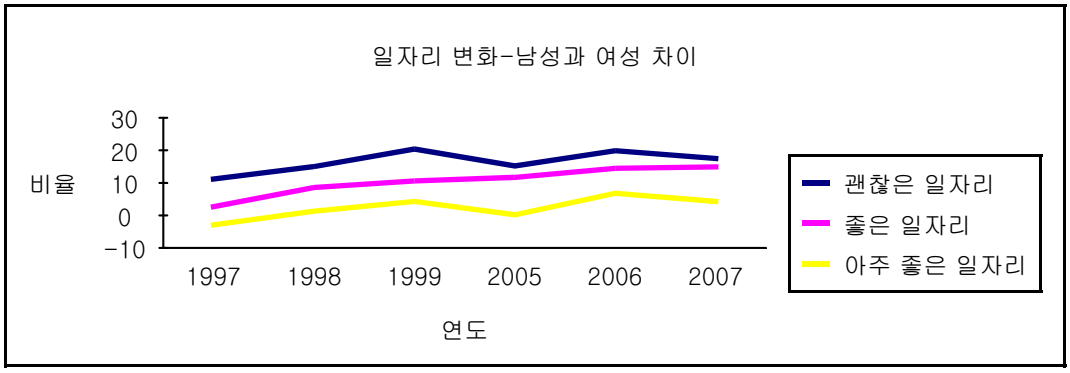
여성과 남성의 모든 형태의 일자리 비율의 차이는 1997년 이후 증가추세이며,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에는 1997년과 2007년을 비교하여 볼 때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괜찮은 일자리' 이상을 가질 확률이 더욱 낮아진 것이며 이 결과는 위의 회귀분석결과에서 성별이 모든 일자리를 가질 확률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음과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각 일자리 비율의 변화



자료출처: KLIPS, 각 년도

<그림 2> 각 일자리 비율의 변화 - 남성과 여성의 차이



명에서 1998년도에 8,090,000명으로 감소하였으며(7.3% 감소), 1999년에 회복(8,337,000명)을 시작하여 2007년도에는 9,874,000명으로 증가(18.4% 증가)하여 2007년도는 1997년도와 비교하여 13.1% 순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

2) '좋은 일자리 분포'의 권역별 변화[10)]

(1) 외환위기 기간: 1997-1998년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일자리 분포에 지역별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는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 전국평균은 약 53.3%였으며 서울(58.6%), 부산경남울산(57.2%), 경기인천강원(52.5%)의 순으로 서울과 부산경남울산을 제외한 타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외환위기의 영향이 본격화된 1998년도에는 모든 형태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11)] 1998년도에는 전국의 '괜찮은 일자리' 비율이 44.8%로 1997년보다 8.5%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대구경북(14.4%포인트), 부산경남울산(8.8%포인트), 광주전라(8.1%포인트)의 순으로 하락하여 외환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으로 구분된다. 전국의 '좋은 일자리'의 비율은 7.4%포인트 감소하였는데, 대구경북(13.7%포인트), 대전충청(11.0%포인트)가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이다. 한편 '가장 좋은 일자리'의 경우에는 전국평균은 4.8%포인트 하락하였는데, 광주전라(7.5%포인트), 대구경북(6.9%포인트), 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대전충청지역이 1.8%포인트 하락하여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외환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가장 좋은 일자리'의 하락폭이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2) 외환위기 이후: 1998-2007년

한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자리 질의 회복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괜찮은 일자리'는 1998년도의 44.8%에서 2007년도의 70.6%로, '좋은 일자리'는 26.5%에서 55.8%로, '아주 좋은 일자리'는 동 기간에 13.6%에서 28.4%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발생하였다. 각 일자리의 상승폭은 대구경북(33.8%포인트, 33.2%포인트, 128.6%포인트)이 가장 높았으며, 대전충청, 광주전라의 순이었다.

2007년도에 빈곤선의 150% 수준인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 경기인천강원지역이 72.9%

---

10) KLIPS 자료의 지역 대표성이 결여되어 16개 시군의 일부 분석결과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분석에서는 지역을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11) KLIPS 제1차 설문은 1998년 5월에 진행되었는데, 근로소득은 1998년도 5월 기준이며 1999년도의 제2차 설문은 1998년 기준임.

로 가장 높으며, 부산경남울산(72.7%), 서울(70.9%)의 순이었으며, 가장 높은 부산경남울산과 가장 낮은 대구경북(65.2%포인트)와 약 10.4%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빈곤선의 200% 수준 이상의 일자리인 '좋은 일자리'의 경우, 부산경남울산지역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59.0%), 경기인천강원(56.0%)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가장 낮은 대구경북은 부산경남울산과 약 17.0%의 격차가 존재한다.

한편, 빈곤선의 300% 수준인 '아주 좋은 일자리'의 경우에는 서울이 33.2%, 부산경남울산이 31.4%, 경기인천강원(27.9%)의 순이었으며 지역간의 격차는 약 33.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자리의 질이 높아질수록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일하는 가구주의 일자리 분포의 추세

(단위 : %)

일자리 종류별 (빈곤선 대비 비율)	지 역						
1997	전체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150	53.3	58.6	52.5	57.2	45.8	46.1	47.6
〉=200	33.9	38.3	33.3	32.9	30.2	31.7	29.5
〉=300	13.6	17.7	12.8	14.5	10.3	8.1	10.7
1998	전체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150	44.8	52.5	45.5	46.4	31.4	38.3	39.5
〉=200	26.5	32.2	26.8	27.4	16.5	20.7	25.1
〉=300	8.8	13.2	8.2	8.3	3.4	6.3	8.2
1999	전체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150	53.7	63.2	54.9	53.7	37.4	46.3	50.6
〉=200	32.0	39.9	33.0	29.7	22.2	26.3	29.3
〉=300	15.5	19.7	16.3	12.3	12.8	11.7	15.1
2006	전체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150	70.6	71.0	71.6	73.2	66.1	70.4	66.3
〉=200	54.1	56.9	55.0	56.6	47.8	52.8	49.0
〉=300	27.7	24.8	27.0	28.5	21.6	23.9	25.0
2007	전체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150	70.6	70.9	72.9	72.7	65.2	66.9	67.9
〉=200	55.8	59.0	56.0	59.4	49.3	51.9	52.4
〉=300	28.4	33.2	27.9	31.4	22.0	22.9	26.2

자료: KLIPS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한 결과임.

권역별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러한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표 6〉 참조). 1997년 이후에도 국가 전반적으로 농림어업과 제조업 종사자가 크게 감소하고 사회간접자본/서비스업 종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전충청지역이나 부산경남울산지역의 제조업 종사자는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아주 적었으며 부산경남울산지역의 제조업 종사자는 2007년 현재 25.7%로 전국평균(17.3%)을 크게 상회한다. 또한, 광주전라지역의 2007년 현재 농림어업 비중이 17.0%로 타 권역보다 월등하게 높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분야는 수도권의 비중(85.8%)이 월등히 높으며 인천경기(75.0%), 대전충청(71.9%)의 순이었다. 이러한 산업별 고용구조의 형태는 일부 권역의 산업구조가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며 가구주가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권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과 일관성이 있다.

<표 6> 권역별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

(단위 : %)

지역/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도권	농림어업	0.4	0.3	0.3	0.2	0.2	0.2	0.1	0.1	0.1	0.2	0.1	0.1
	광공업	20.2	18.7	19.0	19.2	18.4	17.5	16.5	16.6	16.2	15.4	14.1	13.3
	제조업	20.1	18.7	19.0	19.1	18.3	17.5	16.5	16.6	16.2	15.3	14.1	13.2
	사회간접자본/서비스	79.5	80.9	80.7	80.6	81.4	82.3	83.3	83.3	83.7	84.5	85.8	86.7
인천경기강원	농림어업	8.4	9.8	9.3	8.8	8.3	7.8	7.7	7.1	7.0	6.8	6.6	6.4
	광공업	24.4	21.5	21.8	22.2	21.3	20.0	19.7	19.7	19.1	19.0	18.4	18.3
	제조업	24.2	21.0	21.4	21.8	20.9	19.7	19.4	19.4	18.8	18.6	18.1	17.9
	사회간접자본/서비스	67.3	68.7	68.8	69.0	70.5	72.2	72.6	73.2	73.8	74.2	75.0	75.3
부산경남울산	농림어업	8.1	8.6	8.7	8.3	8.0	7.4	7.6	7.2	7.2	6.9	6.5	6.3
	광공업	25.2	27.8	27.3	28.0	27.8	27.6	26.8	26.2	26.1	26.2	25.8	25.7
	제조업	25.2	27.8	27.3	28.0	27.8	27.6	26.7	26.2	26.0	26.1	25.7	25.6
	사회간접자본/서비스	66.7	63.4	64.0	63.7	64.1	65.0	65.5	66.5	66.8	67.0	67.7	68.0
대구경북	농림어업	17.7	17.8	16.3	16.3	15.4	14.4	14.4	13.5	13.1	13.3	13.1	12.6
	광공업	21.7	20.9	21.3	21.4	20.8	20.4	20.2	20.6	20.3	19.1	18.0	17.6
	제조업	21.5	20.9	21.2	21.3	20.7	20.3	20.1	20.6	20.2	19.0	18.0	17.6
	사회간접자본/서비스	60.6	61.4	62.4	62.4	63.8	65.2	65.4	65.9	66.6	67.6	68.9	69.8

지역/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대전 충청	농림어업	20.8	22.0	21.0	19.0	17.6	16.9	14.2	13.1	13.0	13.0	12.5	12.1
	광공업	15.0	15.3	14.9	16.5	16.9	16.6	15.9	15.9	15.6	15.1	15.6	16.0
	제조업	14.8	15.2	14.8	16.3	16.8	16.4	15.8	15.8	15.5	15.0	15.5	15.9
	사회간접자본/서비스	64.0	62.8	64.1	64.5	65.5	66.7	69.8	71.0	71.5	71.9	71.9	71.9
광주 전라	농림어업	22.8	24.9	23.9	23.0	22.0	21.2	19.8	18.4	18.3	17.8	17.0	16.9
	광공업	13.0	11.6	10.9	11.3	11.6	11.5	11.7	12.0	12.1	11.6	11.6	10.8
	제조업	12.7	11.5	10.8	11.2	11.5	11.4	11.6	11.9	11.9	11.5	11.5	10.7
	사회간접자본/서비스	64.3	63.6	65.2	65.7	66.4	67.3	68.4	69.6	69.6	70.5	71.4	72.3

자료: 통계청 KOSIS, 시도별, 시군구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3) '좋은 일자리' 분포의 권역별 변화에 대한 계량 분석

① 외환위기 기간: 1997-1998[12)]

위의 분석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외환위기 기간과(1997년-1998년) 외환위기 이후(1998년-2007년)에 지역 간 일자리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다음의 〈표 7〉에 제시되었다.

1997-1998년의 분석은 준거집단을 1997년의 서울로 설정하고 1997년의 서울과 기타 지역의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주 좋은 일자리'의 분포를 1998년 서울과 비교한 결과, 1998년의 서울 지역의 가구주는 1997년의 서울 지역의 가구주보다 모든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7> 일자리 결정 변수와 한계효과(1997년-1998년, 1998-2007)

	빈곤선 150% 이상 (괜찮은 일자리=1)		빈곤선 200% 이상 (좋은 일자리=1)		빈곤선 300% 이상 (아주 좋은 일자리=1)	
변 수	계 수		계 수		계 수	
	1997-1998	1998-2007	1997-1998	1998-2007	1997-1998	1998-2007
상수항	.282***	.351***	-.005	.029	-.092***	-.177***
교육: (고졸이하 기준)						

12) 외환위기 이후의 침체기와 회복기의 모든 변수에 대하여 비교분석이 가능하나 여기에서는 권역 간 격차의 연구가 중심이므로 이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음.

	빈곤선 150% 이상 (괜찮은 일자리=1)		빈곤선 200% 이상 (좋은 일자리=1)		빈곤선 300% 이상 (아주 좋은 일자리=1)	
대학 이상	.111***	.108***	.091***	.099***	.040***	.046***
대학원 이상	.272***	.149***	.263***	.184***	.125***	.133***
경험	-.005**	-.006**	-.004*	-.002	-.005***	-.002
경험^2	-.000	-.000	-.000	-.000*	.000**	-.000
성별(1: 여성, 0=남성)	-.057**	-.151***	.007	-.101***	.021	-.010
직종(전문직 기준)						
사무직	-.070***	-.057**	-.083***	-.075***	-.034***	-.048***
서비스·판매직	-.070***	-.091***	-.078***	-.087***	-.009	-.023*
농림수산업직	-.192***	-.242***	-.158***	-.206***	-.048	-.081***
단순노무직 등	-.171***	-.156***	-.154***	-.161***	-.061***	-.084***
거주지역 1997-1998:(서울1997년 기준) 1998-2007:(서울1998년 기준)						
인천경기강원1997년(1998년)	-.041**	-.076***	-.020	-.053**	-.016	-.043***
부산경남울산1997년(1998년)	.042	-.024	-.006	-.010	-.002	-.033*
대구경북 1997년(1998년)	-.058*	-.171***	-.014	-.137***	-.023*	-.064***
대전충청 1997년(1998년)	-.078**	-.132***	-.015	-.118***	-.041***	-.064***
광주전라 1997년(1998년)	-.077**	-.117***	-.055***	-.057***	-.029**	-.034
서울 1998년(2007년)	-.042*	.203***	-.052***	.316***	-.026***	.215***
인천경기강원1998년(2007년)	-.113***	.217***	-.088***	.276***	-.050***	.160***
부산경남울산1998년(2007년)	-.064**	.233***	-.052***	.345***	-.041***	.226***
대구경북 1998년(2007년)	-.202***	.155***	-.147***	.233***	-.075***	.131***
대전충청 1998년(2007년)	-.175***	.165***	-.136***	.249***	-.057***	.122***
광주전라 1998년(2007년)	-.157***	.183***	-.088***	.256***	-.041***	.164***
근무기업 규모 (1,000명 이상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019	-.098***	-.032	-.093***	-.040***	-.064***
500~999명	-.030	-.018	.032	-.008	.031	.018
50~499명	-.144***	-.188***	-.087***	-.176***	-.025**	-.097***
5~49명	-.142***	-.190***	-.107***	-.234***	-.027**	-.120***
1~4명	-.255***	-.299***	-.151***	-.298***	-.041***	-.120***
자영업자(나홀로)	-.069*	-.067*	.001	-.084**	.002	-.042*
(피고용자 있는)자영업	.068*	.110***	.164***	.123***	.128***	.129***
미확인 규모	-.219***	-.494***	-.141***	-.239***	-.047***	-.101***
정규직 여부 (1: 정규직 0: 정규직 아님)	.189***	.222***	.141***	.160***	.056***	.104***

주: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자료: KLIPS 1998, 1999, 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얻어진 회귀분석 결과임.

〈표 8〉는 동일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영향에 대하여 분석결과를 요약 및 추출한 것으로 이 표는 1997년도와 1998년도 사이에 모든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 이상의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데, 인천경기강원 등 모든 지역의 모든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비서울지역의 감소율이 서울지역보다 거의 100% 가까이 높아서 비서울지역이 서울지역보다 외환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의 질이 양호한 '아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괜찮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보다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대구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모든 일자리 형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8> 일자리 결정 변수와 한계효과(1997년-1998년)

지 역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아주 좋은 일자리
서울	-.042*	-.052***	-.026***
인천·경기·강원	-.073***	-.070***	-.038***
부산·울산·경남	-.106***	-.047**	-.042***
대구·경북	-.149***	-.137***	-.066***
대전·충청	-.101**	-.125***	-.026
광주·전라	-.084*	-.038	-.016

② 외환위기 이후의 회복기: 1998-2007

외환위기 이후 가장 침체되었던 1998년 말부터 2007년까지의 '괜찮은 일자리' 이상의 일자리의 지역별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가 위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의 분석은 준거집단을 1998년 서울지역으로 설정하고 1998년의 서울지역의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주 좋은 일자리' 분포를 2007년 서울지역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1998년도와 2007년도 사이에 각 종류의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서울지역에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9〉은 각 지역별로 위와 동일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영향에 대하여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이 표는 1998년과 2007년 사이에 모든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 이상의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구울산지역의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와 '아주 좋은 일자리'의 확률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졌으며 '좋은 일자리'와 '아주 좋은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일자리의 비서울지역의 회복율이 서울지역의 회복율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비서울지역의 회복이 서울지역보다 좋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서울지역이 서울지역보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표 9> 일자리 결정 변수와 한계효과(1998년-2007년)

지 역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아주 좋은 일자리
서울	.203***	.316***	.215***
인천·경기·강원	.275***	.328***	.231***
부산·울산·경남	.249***	.354***	.287***
대구·경북	.275***	.370***	.367***
대전·충청	.258***	.365***	.248***
광주·전라	.264***	.312***	.225***

③ 외환위기 이후 순 증감: 1997-2007

위의 분석에서 서울지역이 경기침체기와 경기회복기 모두 경기변동의 영향이 가장 적었고 대구경북이 모든 일자리의 형태에서 경기변동의 영향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표 10〉은 앞의 두 기간(1997년-1998년과 1998년-2007년) 동안의 '괜찮은 일자리' 이상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형태의 일자리가 1997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는 인천경기강원지역, '좋은 일자리'는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아주 좋은 일자리'의 경우에는 광주전라지역의 증가율이 타 지역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높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지역보다 개선('괜찮은 일자리'의 경우 인천경기강원, 광주전라, 대전충청 지역, '좋은 일자리'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지역, '아주 좋은 일자리'의 경우 광주전라지역, 대전충청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되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대표적으로 대구경북)에는 악화되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97년에서 2007년 사이의 10여년동안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괄목할만한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함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표 10> 일자리 결정 변수와 한계효과(1997년-2007년)

지 역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아주 좋은 일자리
서울	.175***	.275***	.183***
인천·경기·강원	.220***	.265***	.163***
부산·울산·경남	.174***	.317***	.197***
대구·경북	.169***	.213***	.163***
대전·충청	.195***	.233***	.208***
광주·전라	.205***	.285***	.218***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11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하여 연구하여 누가 '좋은 일자리'를 소유하며 그 확률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국내의 '좋은 일자리' 변화 추세 및 지역 간 격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는 '교육수준', '성별', '직종', '기업의 규모', '정규직 여부', 그리고 '수도권 여부'가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성별'의 경우, 1997년도보다 2007년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아주 괜찮은 일자리'의 소유비율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일관성이 있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형태의 일자리의 경우에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아주 좋은 일자리'가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회복기간(1998~2007) 동안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회복규모가 타 지역보다 커서 일자리 분포의 격차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지역이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경기변동의 영향을 더욱 받기 때문으로 보이며, 위의 분석에서 서울지역이 경기침체기와 경기회복기 모두 경기변동의 영향이 가장 적었고 대구경북이 모든 일자리의 형태에서 경기변동의 영향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으며 1997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지역보다 개선되었으나 대구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악화되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대구경북지역과 같이 일부 권역의 산업구조가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역 간 일자리 질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일부 산업구조가 경기변동에 취약한 지역에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결국, '좋은 일자리' 분포의 서울과 기타 지방의 지역 간 격차는 서울지역으로의 극심한 인재유출, 생산인력의 고령화 등의 문제점을 가중시켜 비서울 지역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지역 간 '좋은

일자리′ 분포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비서울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 정책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규모가 있는 자영서비스업의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우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상적 임금격차제' 등의 정책이 있으며, 장기 정책으로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고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충분한 보수를 창출할 수 있는 정규직 및 '좋은 일자리' 직종의 증가를 위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신속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연구개발비투자의 활성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향상, 지역기업의 자본설비 투자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3)]

본 연구는 일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여 '좋은 일자리' 결정 요인과 추세, 그리고 지역 간 격차의 변화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체가 아닌 일하는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정하였고 '좋은 일자리'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노동에 대한 일자리 안정성, 사회적 인식, 비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보수만 고려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13) 노동생산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기술혁신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와(황덕순(1999) 참조), 사회간접자본 또는 공공자본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Aschauer (1989a, b), Holtz-Eakin (1992))가 주를 이루었으며 지역 간 산업구조의 차이가 노동생산성(임금)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연구도 있다(ESRC, 2000). 남성일(1991)은 한국 노동생산성의 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하고 기여도가 큰 것은 기술 및 자본의 축적이기 때문에 향후의 지속적인 생산성향상과 임금상승을 위해서는 기술 및 자본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류덕현(2005)은 정부부문의 자본스톡과 생산성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

<부록 표 1> 변수의 통계: KLIPS 1998-2007

변 수	정 의	평균값 (1997)	평균값 (1998)	평균값 (2007)
교육수준	준거집단: 고졸이하	70.0	71.0	57.1
	College: 대학교 이상	25.8	25.2	36.9
	Graduate: 대학원 이상	4.1	3.7	5.9
경험	경험: 나이 - 학력 나이	24.4	26.7	25.8
(경험)^2				
성별	=0 남성	90.6	90.8	87.3
	=1 여성	9.4	9.2	12.7
직업	준거집단: 화이트칼러: 전문직	20.4	29.3	26.4
	Officewk: 사무직	10.2	8.1	11.9
	Service: 서비스직 Sales: 판매직	16.6	11.0	15.7
	Farm: 농업	6.1	6.7	4.2
	Bluecoll: 조립 가공직 및 기타	46.4	44.9	41.7
거주지역	서 울	27.7	26.2	22.1
	인천·경기·강원	26.6	27.6	31.9
	부산·경남·울산	17.0	17.5	17.4
	대구·경북	11.4	11.3	10.4
	대전·충청	8.1	8.1	9.4
	광주·전라	9.1	9.2	8.7
	1998과 2007의 경우에도 동일 변수 적용..			
근무기업규모	준거집단: 임금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8.4	7.9	9.8
	대기업: 500-999 명	1.6	1.4	2.2
	중기업: 50-499 명	11.5	11.5	14.2
	소기업: 5-49 명	16.4	20.2	21.5
	소기업: 1-4 명	4.9	6.3	7.4
	공공기관	11.4	10.9	9.2
	나홀로 자영업자	25.8	24.1	19.9
	피고용자가 있는 자영업자	11.2	12.5	10.7
	미확인 규모	8.9	5.3	5.1
정규직 여부	= 1 정규직	52.3	49.1	56.5
	= 0 기타	47.7	50.9	43.5
표본 수		3,488	3,157	3,323

자료: KLIPS 각 년도

【 참고문헌 】

금재호 (2003), "일과 빈곤,"『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남성일 (1991), "한국 노동생산성의 결정요인과 기여도 분석,"『서강경제논집』 제20집.

대한상공회의소(2004), "2030세대가 원하는 좋은 직장,"『실태조사보고서』, 2004.12.

류덕현 (2003),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생산성,"『재정포럼』, pp. 6-26.

방하남, 이상호 (2006) "좋은 일자리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한국사회학』, 제40집 1호 pp. 93-126.

석재은 외 (200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09.

정성철 (2006),『제1회 전라북도 과학축전 과학기술혁신 포럼』전북발전연구원.

황덕순 (1999), 기술혁신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노동경제논집』 제 22권 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 "미국 경쟁력 강화 계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자료 2006-01.

Ahlburg et al. (1995), "Are Good Jobs Disappearing? Evidence from the 1980 and 1990 Censuses," 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 1995.

Aschauer, D. (1989a) "Is Public Expenditure Productiv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3, pp. 177-200.

Aschauer, D. (1989b) "Public Investment and Productivity Growth in the Group of Seven," *Economic Perspectives*, Vol. 13, pp. 17-25.

ESRC (2000) "Regional Wage Inequality in the UK: Evidence and Explanations,"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Research Report*.

Holtz-Eakin (1992) "Public-sector Capital and the Productivity Puzzle," *NBER Working Paper* No. 4122.

Levy, Frank S., and Richard C. Michel (1991), "The Economic Future of American Families: Income and Wealth Trend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1991.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5),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